

---

#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

---

2021. 12. 30.

관 계 부 처 합 동

# 목 차

I. 추진배경 및 경과 .....	1
II. 추진방향 .....	2
III. 주요 개선과제 .....	3
1. 준조세 규제개선 등 경영부담 경감 .....	3
2. 기술개발 촉진 등 기업경쟁력 제고 .....	5
3. 시장 진입·거래 규제 합리화 .....	7
4. 행정부담 감축 및 현장애로 해소 .....	9
IV. 향후 추진계획 .....	11
붙임. 규제애로 세부 개선내용 .....	12

## I. 추진배경 및 경과

### ① (배경) 공공기관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현장의 활력 제고 시급

- 정부는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별 '기업활력시스템'\*(기업성장응답센터\*\* 등)을 구축·운영중
  - \* 규제애로 건의창구, 기업민원 보호현장, 관련지수 등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기본제도
  - \*\* 중기 옴부즈만과 공공기관의 합동센터로 127개 공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설치(전담인력 223명)  
→ 각종 기업 규제애로를 온·오프라인으로 상시발굴(접수) 및 연계처리하여 혁신성장 지원
- 그간 3차례에 걸쳐 공공기관·정부·민간이 협업을 통해 조달·금융·고유사업 등의 분야에서 공공기관 규제 370건을 집중정비
  - \* 1차('19.12월) 39개 기관 49건 → 2차('20.6월) 69개 기관 115건 → 3차('21.1월) 83개 기관 206건
- 금년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개선\*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
  - \* '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과제(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파 노력)

### ② (경과) 상·하향식 규제애로 발굴 → 협업논의, 규제개선 및 확산

- ❶ (규제애로 발굴) 127개 공공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상·하향식으로 집중발굴
  - (상향식) 금융·기술·조달 등의 분야에서 기업성장응답센터에 접수된 과제와 일선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애로 발굴
  - (하향식) 기업의 경영비용을 증가시키는 공공기관 준조세\*의 현황 및 운영실태 일괄조사하여 하향식으로 개선과제 집중발굴
    - \* 세금 외에 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·사용료·임대료·시험인증비 등 비자발적 금전 부담으로, '20년 공공기관의 사용료 수입은 845억원, 수수료 수입은 34억원 수준
- ❷ (규제개선·확산) 공공기관\*과 중기 옴부즈만이 함께 과제검토 및 개선대안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는 타 기관 확산을 지속 유도
  - \* 대다수 공공기관이 기업현장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으며, 타 기관 우수사례 내부전파 등에도 적극 기여

## Ⅱ. 추진방향

◆ 기업현장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 4대 분야 464건(95개 기관)의 공공기관 규제와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중소기업 활력 제고

\* 기업입장에서 일종의 고정경비인 공공기관 준조세를 기업친화적으로 정비

\*\* 기술개발 촉진, 시장 진입규제 완화, 조달거래 합리화 등도 집중추진

### 추진 목표

공공기관 규제개선 및 맞춤형지원으로 중소기업 활력제고

### 4대 중점 추진과제

#### 1. 준조세 규제개선 등 경영부담 경감 (123건)

- ① 준조세 규제애로 개선 (102건)
- ② 금융규제 개선 및 경영부담 경감 (21건)

→ 위기극복

→ 밀착지원

#### 2. 기술개발 촉진 등 기업경쟁력 제고 (65건)

- ① 기술개발 규제개선 및 지원강화 (51건)
- ② 공공기관별 주요사업의 규제애로 해소 (14건)

→ 성장동력

→ 확충지원

#### 3. 시장 진입·거래 규제 합리화 (164건)

- ① 시장 진입규제 완화 및 지원강화 (30건)
- ② 계약 및 거래관계의 규제 합리화 (134건)

→ 기업진입·

→ 생존 촉진

#### 4. 행정부담 감축 및 현장애로 해소 (112건)

- ① 행정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(38건)
- ② 현장애로 해소 및 사회적 책임 강화 (74건)

→ 기업신뢰

→ 기반강화

### 추진 방식

127개 기업성장응답센터 현장접점을 활용한 협업·확산·연계

### Ⅲ. 주요 개선과제

#### 1. 준조세 규제개선 등 경영부담 경감 (123건)

##### ① 준조세 규제애로 개선 (102건)

###### ① 납부수단 다양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3개 기관

- 각종 수수료 등 준조세 납부시 통상 현금 및 계좌이체만 허용\* → 카드·모바일결제 등 다양한 납부수단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\*\*

\* 전체 공공기관 준조세 중 카드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약 20%에 불과

\*\* 국세·지방세는 신용·직불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모바일 결제도 보편화 추세

###### ② 중소기업 감면제도 도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16개 기관

-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등록·시험수수료 등 준조세에 대하여 중소기업 감면근거 마련 및 감면 시행

\* 심사평가비(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), 화학물질등록면제 수수료(한국환경공단) 등

###### ③ 준조세 분할납부 허용 창업진흥원 등 20개 기관

-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, 사용료, 시험인증비 등에 대해 국세 징수와 같은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기업의 자금운용 편의성 제고

\* 창업지원센터 사용료(창업진흥원), 항만시설사용료(인천항만공사), 보증료(기술보증기금) 등

###### ④ 준조세 과오납 환급허용 한국환경공단 등 14개 기관

- 공공기관 준조세 과오납분에 대한 환급\* 근거를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절차적 권리 보장

\* 국세의 경우 납기 후 5년까지 과오납분에 대하여 환급 요구 가능

###### ⑤ 사용료·임대료 인상근거 마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8개 기관

- 기관 소유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·임대료 인상기준 및 인상률을 공시하여 과도한 인상 방지 및 중소기업 부담완화

## ⑥ 각종 보증금 선제적 반환조치 명문화 울산항만공사 등 15개 기관

- 임대·입찰·계약·하자 등 각종 보증금이 보증목적을 달성한 경우, 기업신청이 없어도 보증금을 즉시 반환토록 관련 내부규정 정비
- \* 국가계약법령은 계약 이행 후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규정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신청절차를 요구중

## ② 금융규제 개선 및 경영부담 경감 (21건)

### ① 항공분야 현장맞춤 상생협력펀드 지원강화 한국공항공사

- 기존 상생펀드\* 이외, 추가로 코로나 상생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지원대상·대출한도·감면금리·조성금액 등을 대폭 확대·지원\*\*
- \* 기관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해당 예치이자를 활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이자를 보전
- \*\* (대상) 지상조업사, 저가항공사, 상업시설 지원, (한도) 2~5억원, (금리) 최대 2.05%

### ② 신재생에너지 분야 보증지원 확대 및 부담경감 기술보증기금

- 기업의 탄소저감 시설·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기존한도에 추가보증 지원\* 및 소규모 보증 평가부담 경감\*\*
- \* 기업의 향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금액화하여 평가된 금액만큼 보증지원(탄소가치평가모델)
- \*\* 보증신청금액 2억원 이내시 외부자문 생략, 평가료 최소화(20만원), 처리기간 단축(1/2)

### ③ 투명경영이행 약정인 대상범위 축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- 대출보증시 투명경영이행 약정\* 체결 대상자에서 법인 대표를 제외하여 기관 사전승인\*\* 없이도 대표교체가 가능토록 경영 자율성 보장
- \* 법인대표자와 실질기업주를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대신 성실경영의무 등을 부과
- \*\* 약정을 체결한 자가 경영에서 물어나거나 지분을 매각할 경우 공단의 사전승인이 필요

### ④ 냉난방 사용료 부과기준 합리화 및 설치지원 한국공항공사

- 냉난방 사용시간에 관계없이 면적 기준으로 요금부과\* → 냉난방 공급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설치비용 지원
- \* 냉난방 공급시간 : (코로나 이전) 05~22시, 17시간 → (이후) 07~18시, 11시간

[사례] G사는 손님이 없어 공항청사 운영시간을 단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냉난방 사용료는 동일한 요금체계로 부과하고 있다고 불만 제기

## 2. 기술개발 촉진 등 기업경쟁력 제고 (65건)

### ① 기술개발 규제개선 및 지원강화 (51건)

#### ① 지진관측장비 테스트베드 신청자격 완화 한국기상산업기술원

- 테스트베드\* 신청자격을 지진분야 기상사업자\*\*에서 지진장비 관련 '제조기업'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기술개발기업의 참여 허용

\* 지진관측장비 국산화 및 성능향상을 위해 감도, 시각오차 등의 항목 성능분석을 지원

\*\*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기상예보업·감정업·컨설팅업·장비업

#### ② 물산업 테스트베드 운영기간 확대 및 평가 간소화 한국수자원공사

- 테스트베드\* 기간을 확대(1년 이내 → 심의 후 변경가능)하여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, 기술성능확인 평가절차를 간소화\*\*하여 기업 부담 완화

\* 정수장, 댐과 같은 시설을 민간에 개방하여 장비 등을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제공

\*\* (기존) 현장평가 후 종합평가 → (개선) 현장평가에서 일정요건 충족시 종합평가 생략

#### ③ 신기술 통신 서비스·제품 상용화 검증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

- 5G·IoT 기반 신제품에 대하여 통신사별 별도 기술검증 절차 없이, 공공기관의 1회 검증 통과만으로 상용화 및 출시 지원

☞ 효과 : 개발기간 평균 1.6개월 단축 및 업체당 평균 검증비용 81백만원 경감

[사례] F사는 제품 상용화를 위한 절차가 통신사별로 상이하고 대기시간이 2~3개월 소요되어 시장출시가 지연된다고 부담토로

#### ④ 공동연구개발 지식재산권 특허·출원비 지원 한국전력기술

- 공동연구개발시 지식재산권의 특허·출원비는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라 분담 → 공공기관이 관련비용을 전액부담하여 기술개발 지원

[사례] D사는 중소기업 협력연구 기술개발사업을 수행중에 적지 않은 지식재산권 등록비용이 발생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기술개발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

## ② 공공기관별 주요사업의 규제애로 개선 (14건)

### ① 수질측정기기 형식승인 사전검증 기술지원 한국환경공단

- 형식승인 최종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탈락사유\*를 초기에 점검할 수 있는 사전검증을 지원하여 기업 비용절감과 출시 지연 방지

\* 초기단계에서 기기의 규격·성능 등을 검사시 통신표준규격을 검사하지 않으나, 최종 현장시험에서 통신표준규격 부적합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

☞ 효과 : (수혜 사업장) 1,019개, (수혜 제작사) 17개사, (예상비용 절감) 1.4억원

[사례] G사는 시험검사기관 형식승인을 득하였음에도 현장시험에서 탈락되어 변경형식승인 비용발생 및 제품출시 지연(6개월)에 불만 토로

### ② 발전설비 비대면 스마트 품질검사시스템 개발·도입 한국남동발전

- 현장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던 발전설비 품질검사 일부를 비대면 스마트 검사시스템\*으로 전환하여 검사비용 경감 및 편의성 제고

\* 자재·압력·치수·성능·도장검사 등 표준검사 절차에 따른 검사결과 확인 및 보고서 자동생성

### ③ 전력량계 오차시험 민간인정기관 참여허용 한국전력거래소

- 신재생사업자의 오차시험\* 소요시간·비용 경감을 위해 민간인정기관이 사업장에서 현장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

\* 1MW 초과 발전기는 주기적으로 공인시험기관 위탁(계량기 탈거·운반·부착 부대비용 발생 및 기간 장기화) 또는 전력거래소 직원 입회 하 오차시험을 받아야 함

[사례] D사는 공장을 문 닫을 수 없어 공인시험기관 위탁(위탁시 전력량계 탈거 및 운반비 50만원 부대발생)을 원치 않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력거래소 의무입회도 어렵다며 보다 간소화된 검사방법 마련을 요구

### ④ 완구류 재활용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한국환경공단

- 완구류(장난감) 재활용지원금 지급대상을 기존 재활용사업자 뿐만 아니라 회수선별사업자로 확대하여 재활용\* 제고 및 기업지원

\* 절차 : 회수선별사업자가 재활용 품목 선별·판매 →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 실시 → 제품 생산자가 재활용된 상품 판매

[사례] 폐기물 회수·선별업체인 N사는 완구류 품목 선별 및 판매를 검토하였으나, 비용대비 경제성이 부족하여 완구류 품목 선별 없이 폐기처리



### 3. 시장 진입 · 거래 규제 합리화 (164건)

#### ① 시장 진입기준 완화 및 지원강화 (30건)

##### ① 에너지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확대 및 지역기업 우대 한국전력공사

- 강소연구개발특구(전남나주)\* 사업화 지원대상을 기존 에너지신산업에서 모든 에너지분야로 확대하고 지역 소재 창업기업 우대
- \* 연구개발특구로서 특화분야가 에너지신산업(태양광, 에너지 저장 등)으로 한정

##### ②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개방·활용 창업지원 한국관광공사 ·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- 관광분야 벤처기업 등을 위한 민간개방용 관광빅데이터\*의 생산·수집을 확대 및 개방하여 민간기업 창업지원\*\*(관광공사)
- \* 지역별 방문자수, 인기검색, 관광지별 혼잡척도, 평균관광 소요시간, 다국어 관광 정보 등 민간서비스와 차별화된 개방데이터로 지속 확대 추진
- \*\* 공사 개방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여 핀란드 혁신사례(지자체와 스타트업이 협업하여 오디오GPS 개발)와 같은 성공모델 창출 중장기 추진
- 환경기업 창업촉진을 위해 유관기관 데이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데이터 확대개방\* 및 민간 보유 데이터 확보지원\*\*(환경산업기술원)
- \* 세탁세제 소분 리필 판매기 위치 데이터, 탄소중립 환경정보 공개대상 목록 등 실생활과 직결되어 민간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위주로 개방
- \*\* SNS 키워드, 카드사 매출데이터, 물류 이동 데이터 등(한국데이터거래소 협업)

##### ③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개발기업 조달시장 진입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

-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조달 참가시 필수로 거쳐야 하는 구현적합성 검증\*을 한시적으로 유예(~'24년)하여 시장진입 지원
- \* 보안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이나, 기존 보안제품과 달리 클라우드 보안서비스의 경우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부재하여 진입장벽으로 작동

[사례] A사는 클라우드 전환 흐름에 맞춰 3년 동안 웹방화벽 개발에 매진했지만 구현적합성 검증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보안인증을 받을 수 없어 공공기관 납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불만 토로

#### ④ 원전 중소 제조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현실화 한국수력원자력

- 원전시장 위축을 반영하여 중소 제조기업 입찰가점 상향조정, 고용유지 가점신설\*을 통해 조달참여 기회 확대

\* 물품제조·구매입찰 적격심사 가점 : (제조기업) 0.5점→1점, (고용유지) 0점→0.5점

☞ 효과 : 원전관련 중소기업 1,700개사중 약 610개 중소기업(36%)이 수혜대상

## ② 계약 및 거래관계의 규제 합리화 (134건)

### ① 화훼공판장 입주사 대상 과도한 관리규제 개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- 화훼공판장 입주사에 대한 불필요한 지도점검·검사, 과도한 자료제출, 신용조사 의무실시 등을 개선\*하여 영업자유성 보장

\* ① (점검·검사) 거래형태 가격, 품질, 영업장부, 종사원 교육·접객태도 등 항목폐지, ② (자료제출) 거래처 관련자료, 매출현황·내역 제출 폐지, ③ (신용조사 의무) 폐지

### ② 항만시설 사용변경 사후승낙 신설 및 사용정지 요건완화 울산항만공사

- 현장상황이 긴급한 경우\* 사용변경의 사후승낙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사용료 체납에 따른 사용정지 요건을 완화(1일→3개월)

\* 천재지변, 안전사고 발생우려, 비상상황 등으로 기존에는 반드시 사전승낙 필요

### ③ 계약체결 포기기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중부발전

- 자재단가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약을 포기한 기업\*에 대하여도, 일반기업과 같이 조달 입찰보증금 납부의무를 면제

\* 포기기업은 1년간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를 받지 못하나 일반기업은 지급각서로 대체가능

[사례] 건설업체 K는 부정당업자도 아니고 자재단가 인상으로 손해보고 납품할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입찰을 포기하였는데 보증금을 부과한다고 불만

### ④ 도로 유지보수공사 관련 위탁 교통관리비 단가 상향 한국도로공사

- 시공사가 교통안전관리업체에 교통차단업무 위탁시 도급단가가 아닌 설계단가로 비용정산\*토록 하여 수탁업체의 부담 경감

\* 도급단가는 입찰과정에서의 낙찰률을 적용하게 되어 설계단가 대비 약 86% 수준에 불과

## 4. 행정부담 감축 및 현장애로 해소 (112건)

### ① 행정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(38건)

#### ①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신청서류 간소화 한국석유관리원

- 공공기관이 직접 확인 가능한 품질검사\* 신청서류(사업자등록증, 수출입업 등록수리서)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부담 경감

\* 수입한 석유대체연료를 국내에 판매·인도하는 경우 품질검사 실시

#### ② 공사·용역 보안서류 제출대상·범위 명확화 한국중부발전

- 보안서류\* 제출 대상을 모든 공사·용역에서 정보보안 연관성이 높은 일부 공사·용역으로 축소하여 부담경감

\* 보안특약조항에 따른 보안서약서, 보안각서, 자료삭제 및 반납확인서, 보안 협약서 등

#### ③ 특정공법 선정심의 공개범위 및 이의제기 기간 확대 한국도로공사

- 특정공법 선정심의\* 결과 공개기간과 이의제기 신청기간을 연장(5일→10일)하고 평가점수·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

\* 특허를 받은 공법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인증신기술 등으로 고속도로 신설·확장 공사(순공사비 1억원 이상) 설계시 특정공법을 적용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필수 절차

[사례] 신기술 보유업체 H사는 공사가 시행하는 특정공법 미선정 결과에 납득할 수 없어 점수공개 및 심의위원 명단을 요구하는 등 이의제기하려 하였으나 기한이 짧아 신청조차 못하였다고 불만 토로

#### ④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조건부 사전 사용승인 절차 마련 한국환경공단

- 기관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\*에 대해 조건부 사전 사용승인\*\* 절차를 도입하여 기업의 시험자료 사용 대기기간 단축(2개월→2주)

\* 화학물질 제조·수입시 필요한 화학물질이 인체·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로서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공단에서 시험자료를 생산, 저작권·국유재산 등록 후 기업에 제공

\*\* 향후 사용료 납부를 조건으로 기업에게 시험자료를 저작권·국유재산 등록 이전에 제공

## ② 현장어로 해소 및 사회적 책임 강화 (74건)

### ① 열차 내 광고 영업권 최대 계약기간 연장 주식회사 에스알

- 광고 영업권에 포함된 고정비용\* 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한도를 연장(최대 5년→10년)하여 사업성 보장 및 현장어로 해소

\* 광고영업권에 포함된 필수 서비스 사항: ①자동안내방송·무선인터넷 설비개량 및 유지보수, ②객실 모니터 개량, ③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료 등

### ② 건설기계 제작업체 무상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

- 건설기계 형식승인\*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무상 현장방문 컨설팅\*\*을 실시하여 맞춤형 기술 지원

\* 건설기계 제작·조립·수입시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검사·확인

\*\* 비위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식사시간외 컨설팅 실시 및 당일 복귀, 감사부서 동반출장

### ③ 도로공사 설계환경 변화대응 무상교육 실시 한국도로공사

- 3차원 설계기법(건축정보모델)\* 전면도입에 따른 중소 설계기업의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온·오프라인으로 관련교육을 무상실시

\*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시설물 형상, 속성 등을 디지털 정보로 표현하는 설계(Building Information Modeling)

### ④ 소비자 민원에 대한 기업의견 진술권 강화 한국소비자원

- 소비자 민원에 따른 분쟁조정 등의 경우 사업주의 의견진술권을 적극 보장·강화\*하여 기업 불이익 최소화

\* (기존) 민원에 대한 의견진술 기한(3일) 초과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→ (개선) 의견진술 기회를 추가 1회 부여

### ⑤ 산업단지 개발관련 기업신뢰 제도강화 한국산업단지공단

- 기업신뢰와 업무책임성 확보를 위해 산단개발 미공개 정보 취급 직원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\*와 중대 비위자 제제\*\* 강화

\* 청렴서약서 작성 의무화, 토지보상 관련 익명신고 신설,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등

\*\* 중대 비위행위자 성과급 지급제한, 임원징계 시 심의기구 상향(인사위→이사회) 등

## IV. 향후 추진계획

### ① 규제애로 개선과제 신속조치 · 개선확산 및 기업홍보 적극 실시

- ❶ (신속조치) 금번 규제혁신 개선과제가 조기에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신속조치 및 이행점검 실시('22.상)  
\*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과제 적극안내
- ❷ (개선확산) 준조세 등 규제애로 개선과제를 적극 전파하고 관계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·조정하여 개선확산 적극 유도
- ❸ (기업홍보) 공공기관 규제애로 정비에 대한 기업현장 인지도 ·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방위 홍보 실시(~'22.3월)
  - 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그간의 공공기관 규제 정비 과제를 총괄하여 집중홍보\*
  - \* 사례홍보와 더불어 규제애로 추가발굴 및 체감도를 조사하여 사후 규제정비에 활용

### ②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· 가동 지속 확대 및 역량 제고

- ❶ (설치확대) 공기업·준정부기관을 넘어 기타 공공기관\*을 대상으로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 필요성 전파 및 가동 유도(~'22.하)  
\* 한국산업은행,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자발적으로 기업성장응답센터 기 설치·운영
- ❷ (역량제고) '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대안 마련' 기본역량\*을 높이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 직원에 대한 규제혁신 집합교육 실시  
\* 복잡다기한 규제사항에 대한 기본이해가 있어야 기업과의 충분한 소통, 양질의 규제애로 발굴·개선이 가능
  - 또한 지역별 기업성장응답센터 협의체\* 구성을 유도하여 기관간 규제혁신 지식공유 및 기관합동 업무처리 활성화 유도
  - \* 현재 발전공기업, 부산지역 공공기관은 기업성장응답센터 협의체를 기 운영중

# 붙임

# 규제애로 세부 개선내용

연번	과제명	주요 내용	소관 (기한)
<b>1. 준조세 규제개선 등 경영부담 경감 (123건)</b>			
<b>① 준조세 규제애로 개선 (102건)</b>			
001 - 023	납부수단 다양화	<p><b>현행</b> 공공기관 준조세* 납부관련 신용카드 및 모바일결제 수요가 많음에도 현금 및 계좌이체만 허용**하여 납부자 불편 가중  * 수수료, 사용료(임대료), 사회보험료, 부담금, 행정제재금(과태료·과징금), 공공요금, 의무교육비, 인증검사비, 협회조합비 등  ** 공공기관 부과 준조세 중 약 20%는 계좌이체와 카드납부 허용중</p> <p><b>개선</b> 계좌이체, 현금으로만 납부가능하던 수수료, 사용료, 시험인증비 등을 카드결제, 모바일결제 등으로 다양화  * 탄소검증수수료(한국에너지공단), 항만시설 임대료(인천항만공사),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수수료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) 등 납부수단 추가</p> <p><b>개선</b> 한국국토정보공사, 창업진흥원, 주식회사 에스알, 인천항만공사, 한국환경공단, 한국에너지공단, 예금보험공사, 한국장애인고용공단, 부산항만공사, 한국전력공사,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한국임업진흥원,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, 한국전력거래소, 한국마사회('21.10월), 아시아문화원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독립기념관, 울산항만공사, 한국기상산업기술원, 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'22.2월)</p>	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 ( '22.2월)
024 - 039	중소기업 감면제도 도입	<p><b>현행</b> 창업기업·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에 비해 공공기관 준조세의 경우 감면제도가 미흡  *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5조의2(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 특례)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8조의3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) 등</p> <p><b>개선</b>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부과 준조세 감면근거 마련 및 감면 시행  * 화학물질등록면제 수수료(한국환경공단), 심사평가비(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) 등</p> <p><b>개선</b> 한국소비자원, 한국중부발전,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, 근로복지공단,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, 한국임업진흥원, 대한석탄공사, 아시아문화원, 국민체육진흥공단, 도로교통공단('21.10월), 한국전력거래소, 울산항만공사, 한국환경공단, 한국보육진흥원, 한국특허전략개발원('22.2월)</p>	농림식품 기술기획 평가원 ( '22.2월)
040 - 059	준조세 분납납부 허용	<p><b>현행</b> 국세징수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분할납부를 공공기관 준조세 납부 시에는 제도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납부자에 불리</p> <p><b>개선</b> 공공기관 부과 수수료, 사용료, 시험인증비 등에 분할납부 허용  * 팀스타운 사용료(창업진흥원), 항만시설사용료(인천항만공사), 보증료(기술보증기금) 등 분납 허용</p> <p><b>개선</b> 한국기상산업기술원, 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동서발전, 독립기념관,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, 아시아문화원('21.10월),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,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주식회사 에스알, 근로복지공단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, 한국무역보험공사, 한국가스안전공사, 한국전력기술, 한국마사회, 한국임업진흥원, 한국교육기술정보원, 한국보육진흥원('22.2월)</p>	창업 진흥원 ( '22.2월)

연번	과제명	주요 내용	소관 (기한)
060 - 073	준조세 과오납 환급허용	<p><b>현행</b> 국세는 납기후 5년까지 과오납 세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 준조세는 과오납 환급이 불가</p> <p><b>개선</b>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준조세의 과오납 환급이 가능한 공공기관 내규 마련 및 환급 시행  * 국유재산 사용료(한국환경산업기술원), 시험검사인증비(한국환경공단), 기술요건 평가수수료(한국조폐공사) 등 과오납 환급 허용</p> <p><b>개선</b>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, 한국전력기술, 주식회사 에스알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한국임업진흥원, 도로교통공단, 아시아문화원, 한국마사회, 한국환경산업기술원('21.10월), 한국조폐공사, 한국보육진흥원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'21.12월)</p>	한국 환경공단 (‘22.2월)
074 - 081	사용료·임대료 인상근거 마련	<p><b>현행</b> 국유재산법령은 국·공유재산 사용료의 조정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부과 각종 사용료·임대료 등에 대해 인상기준이 없어 초과인상 등 중소기업 부담 초래  * 과도한 주차료 인상으로 인한 감사원 감사 사례 발생</p> <p><b>개선</b> 기관 소유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·임대료 인상기준 및 인상률을 공시하여 과도한 인상 방지 및 기업 부담완화  * 임대료 인상률 내부보고 체계 마련(국민체육진흥공단), 시험검사인증비 물가인상분 근거 반영(한국환경공단)</p> <p><b>개선</b> 농업기술실용화재단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, 한국조폐공사, 한국환경공단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한국조폐공사('22.2월)</p>	국민체육 진흥공단 (‘22.2월)
082 - 085	각종 보증금 선제적 반환조치 명문화(임대료 등)	<p><b>현행</b> 공공기관은 임대료, 선박료, 보증보험료 등은 과업이행 후 지체없이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별도 요청절차 요구</p> <p><b>개선</b> 공공기관이 과업이행 후 반환 처리해야하는 각종 보증금에 대하여 상대방의 요청없이도 즉시 반환토록 규정명문화  * 선박료, 화물료 등(울산항만공사), 보증보험료(한국보육진흥원) 등 관련 과업이행 후 즉시반환 근거 마련</p> <p><b>개선</b>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, 한국보육진흥원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'21.12월)</p>	울산 항만공사 (‘22.2월)
086 - 096	각종 보증금 선제적 반환조치 명문화(계약보증금 등)	<p><b>현행</b> 각종 계약보증금(입찰·계약·하자보증금 등)은 보증목적 달성시 '계약상대자 요청'에 따라 반환토록 하여 기업부담  * 계약관련 보증금은 과업이행 후 상대방에 지체없이 반환토록 상위법령(용역계약 일반조건)에서 규정중</p> <p><b>개선</b> 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경우, 별도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즉시 반환하도록 내부규정 마련  *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</p> <p><b>개선</b>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'22.6월), 한국특허전략개발원('21.10월), 주식회사 에스알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'21.11월)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, 국민연금공단, 한국교육학술정보원, 한국보육진흥원('21.12월), 창업진흥원('22.6월)</p>	한국국토 정보공사 (‘21.1월)
097 - 102	공공기관 준조세 산정기준 합리화	<p><b>현행</b> 일부 공공기관 부과 수수료, 사용료의 경우 부과근거가 없거나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납부기업에 부담  * 일부기관의 정기적 심사비용이 산출근거 없이 과도하게 산정</p> <p><b>개선</b> 공공기관 부과 준조세의 명확한 부과근거 및 산출기준 마련  * 열공급시설 검사수수료산출기준 마련, BEMS 설치확인 수수료 산출 기준 내규 반영</p> <p><b>개선</b> 아시아문화원, 국민체육진흥공단,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, 한국환경공단, 한국조폐공사('22.2월)</p>	한국 에너지 공단 (‘22.2월)



연번	과제명	주요 내용	소관 (기한)
<b>② 금융규제 개선 및 경영부담 경감 (21건)</b>			
103	항공분야 현장맞춤 상생협력펀드 지원강화	<p><b>현행</b> 기존 펀드 대출실적 미흡,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항공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* 기관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고 해당 예치이자를 활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이자보전</p> <p><b>개선</b> 별도의 코로나 상생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지원대상·대출한도·감면금리·조성금액 등을 대폭 확대·지원  * (대상) 지상조업사, 저가항공사, 상업시설 지원 (한도) 2~5억원 (금리) 최대 2.05%</p>	한국 공항공사 (21.12월)
104	신재생에너지 분야 보증지원 확대 및 부담경감	<p><b>현행</b> 탄소감축 산업구조 전환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저감시설 도입시 비용부담 및 경쟁력 약화 등 효율적 대응 어려움  * 탄소저감시설 도입비용, 인력 및 기술부족 등</p> <p><b>개선</b> 탄소저감 시설·기술개발 부담경감을 위해, 탄소가치평가모델*을 통한 추가 보증지원 및 소규모 보증에 대한 평가부담 경감**  * 기업의 향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로 평가하여 기존한도 추가 보증지원  ** 보증신청금액 2억원 이내시 외부자문 생략, 평가료 최소화(20만원), 처리기간 단축(1/2)</p>	기술 보증기금 (21.6월)
105	투명경영이행 약정인 대상범위 축소	<p><b>현행</b> 투명경영이행약정 제도 상 실질기업주 외 대표자까지 약정인에 포함하고 가벼운 위반도 일괄제재, 기업활동 위축</p> <p><b>개선</b> 투명경영이행약정 약정인을 실질기업주로 한정하고 약정 위반시 제재범위를 경영의무로 제한하여 기업활동 활성화  * 중진공 '직접대출 및 대출금 관리요령' 개정</p>	중소 벤처기업 진흥공단 (21.3월)
106	냉난방 사용료 부과기준 합리화 및 설치지원	<p><b>현행</b> 공사 임대 소상공인 냉난방 사용료를 사용시간과 무관하게 면적당 단가로 부과하여 부담 가중</p> <p><b>개선</b> 냉난방 공급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개별 냉난방기 설치 비용지원 등 부담 경감  * 공사 '임대계약서' 전기료 납부기준 개정</p>	한국 공항공사 (22.6월)
107	녹색보증 대상기업 확대	<p><b>현행</b> 녹색보증 대상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저탄소 경제 전환 촉진 등을 위한 타분야 우대지원 강화 절실</p> <p><b>개선</b>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업* 전제로 녹색보증 대상을 확대하여 탄소중립 경제전환 촉진 기여  * 제조·생산과정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보유 또는 활용 기업,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기업</p>	기술 보증기금 (21.2월)
108	한국판 뉴딜 기업 등 Trust-On 보증 지원 확대	<p><b>현행</b> 연대보증 입보면제 평가 시 자본금 규모나 국세 체납사실 등 평가지표를 일괄 적용하여 창업·소기업에 불리</p> <p><b>개선</b> 평가 E등급인 한국판 뉴딜 기업, 유망창업기업을 Trust-On 보증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보증지원 사각지대 해소  * Trust-On 보증 운용기준 개정</p>	신용 보증기금 (21.1월)
109	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한 ICT 유망기업 상환유예 적용	<p><b>현행</b> ICT 유망기업을 위한 'ICT GROWTH 협약보증' 지원 시 분할상환조건 원칙으로 인해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한계</p> <p><b>개선</b> ICT 유망기업에 3년간 분할상환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데스밸리 극복 및 유연한 자금운용 지원  * ICT GROWTH 협약보증 운용기준 개정</p>	신용 보증기금 (21.3월)
110	상생결제제도 활성화	<p><b>현행</b> 상생결제제도 약정 금융기관은 1개社(신한)로 거래 상대방의 이용불편, 제도홍보 등 운영상 한계점으로 추진실적 미흡</p> <p><b>개선</b> 약정 금융기관을 5개社(신한, 하나, 국민, 농협, 기업)로 확대하고 관련기준 완화로 하도급 사업자 경영애로 해소  * 공항공사 상생결제 제도 확대 내부결재</p>	한국 공항공사 (21.6월)
111	항만운영사 임대 계약이행보증금 완화	<p><b>현행</b> 인천내항 부두운영 임차업체 경영악화로 보증보험증권 제출 대신 정기예금 질권설정으로 대체 요청</p> <p><b>개선</b> 임차업체 요청에 따라 정기예금 질권설정으로 변경하여 계약이행보증 방법 추가 및 수수료 절감  * 인천항만공사 계약이행보증 방법 내부검토 및 결재</p>	인천 항만공사 (21.6월)



연번	과제명	주요 내용	소관 (기한)
112	중소기업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지원기준 완화	<b>현행</b> 선금지급액이 2억이하, 1년 이내 용역에 대해서만 선금이행보증 보험료 90% 지원하여 확대 요청 증가 <b>개선</b> 5억 이하 2년 이내 용역으로 완화하여 보험료 지급대상 확대 * 남동발전 중소기업 지원패키지 시즌2 추진계획 시행	한국 남동발전 (‘21.5월)
113 - 116	기관보유 지식재산권 경상기술료 감면	<b>현행</b> 공공기관 보유 특허,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을 이전받은 협력사에게 매년 경상기술료*(매출액의 1~5%, 1.5억원) 부과 <b>개선</b> 코로나19 종료시까지 기술이전 경상기술료 납부기한 연기 및 감면 지속 시행 <b>개선</b>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‘20.12월), 한국지역난방공사(‘21.1월), 한국국토정보공사(‘21.10월)	한국 가스공사 (‘21.12월)
117	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한시적 확대	<b>현행</b> 5천만원 이상 공사·용역 계약시 보증금*을 납부해야 하나 경기침체 및 기업 경영악화 등 준조세 부담가중 애로 호소 * 계약금액의 10%, 단 한시적(‘21.12.31)으로 5% 적용 <b>개선</b>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(5천만원→1억원 이하, 각서대체) * 코로나19 등 경영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 완화	한국 중부발전 (‘21.10월)
118 - 119	조달계약 중소기업 인지세 부담 완화	<b>현행</b> 공사·용역 등 계약서 작성시 ‘인지세’ 납부에 대한 구체적 내부기준 부재로 전액(100%) 기업이 부담하는 불합리 존재 <b>개선</b> 기업의 비용지출 부담완화를 위한 인지세 납부기준* 마련 * 계약상대자와 50:50 부담,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(조문신설) <b>개선</b> 한국조폐공사(전자계약 인지세 균등 분할납부 규정화, ‘21.6월)	한국국토 정보공사 (‘21.1월)
120	안전경영 우수기업 정책자금 지원확대	<b>현행</b>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안전수준 진단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안전조치 강화부담 상당 <b>개선</b>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협업개발하고 관련 안전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* 지원한도 상향(60→100억원), 평가시 기술성 점수 우대	중소 벤처기업 진흥공단 (‘20.12월)
121 - 123	강원랜드 임대료 감면 및 계약조건 개선	<b>현행</b>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강원랜드 31개 임대업장 대상 임대료 감면 필요 <b>개선</b> 임대료 50% 감면, 휴업기간 100% 감면, 연체이자 상한율 축소로 소상공인 경영 지원 * 강원랜드 ‘임대계약’ 한시 완화조건 적용 <b>개선</b> 한국공항공사(임대료, 1,311억원 감면, ‘21.2월), 국민연금공단(50% 감면, ‘21.7월)	강원랜드 (‘21.1월)
<b>2. 기술개발 촉진 등 기업경쟁력 제고 (65건)</b>			
<b>① 기술개발 규제개선 및 지원강화 (51건)</b>			
001	지진관측장비 테스트베드 신청자격 완화	<b>현행</b> 지진관측장비 개발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참여대상자가 ‘기상사업자’로 한정되어 있어, 다수 기업 참여기회 박탈 *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인력, 시설을 갖춘 등록사업자 <b>개선</b> 신청자격을 국내 지진분야 기상사업자*에서 국내 지진장비 관련 제조업으로 확대 * (신청) ‘21.4월, (설치·운영) ‘21.5월~9월, (분석·환류) ‘21.10월~11월	한국 기상산업 기술원 (‘21.4월)
002	물산업 테스트베드 운영기간 확대 및 평가 간소화	<b>현행</b> 테스트베드를 통한 기술성능확인을 위한 기술적용 과제 참여기업의 짧은 운영기간(12개월), 복잡한 평가절차 등으로 불편 가중 <b>개선</b> 테스트베드 시범적용과제 운영기간 예외 인정, 기술성능확인 평가절차 간소화(3단계→2단계) 등 참여기업 업무부담 완화 * 수자원공사 물산업오픈플랫폼 운영규정 개정	한국 수자원 공사 (‘21.4월)

연번	과제명	주요 내용	소관 (기한)
003	신기술 통신 서비스·제품 상용화 검증지원	<b>현행</b> 5G·IoT 기반 제품 상용화를 위해서는 통신사 기술검증이 필수 이나, 통신사별 절차 상이 및 과도한 대기시간(2~3개월) 발생 <b>개선</b>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검증제품은 통신3사 기술검증 없이 제품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개선, 신제품 지원체계 간소화 도모 * IoT 기술검증 협업환경을 통한 One-Stop 처리로 약1.6개월 단축	정보통신 산업진흥원 ('21.8월)
004	공동연구개발 지식재산권 특허·출원비 지원	<b>현행</b> 중소기업 공동개발 기술의 특허출원 지원 시,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부담하여 소규모 연구업체 부담 과다 <b>개선</b> 공동연구개발 국내외 특허출원 시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에 상관없이 한전기술이 전액 부담하여 지원 강화 * 한국전력기술 '중소기업 협력연구 기술개발 처리지침' 개정	한국 전력기술 ('21.12월)
005 - 008	기업 기술정보 보호의무 명확화	<b>현행</b>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, 기업의 경영정보 등 보호에 대한 규정 미비로 기업권리 침해우려 발생 <b>개선</b> 용역계약 체결시 기업의 기술자료에 대한 주요사용 용도, 비밀유지 및 정보반환 등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* 시행 *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 <b>개선</b> 한국남부발전('20.12월), 한국석유공사('21.1월), 한전KDN('21.2월)	한국국토 정보공사 ('21.1월)
009 - 026	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제도 도입	<b>현행</b>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기관 제도 개선 필요 <b>개선</b> 계약상대자인 중소기업의 기술정보 보호를 위한 임치제도 도입 및 비용부담 근거 규정 마련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* 인터넷진흥원 '계약사무처리규칙' 개정 <b>개선</b>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'20.12월), 강원랜드·농업기술실용화재단('21.1월), 그랜드코리아레저('21.6월)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('21.8월), 여수항만공사·인천항만공사·국립공원공단·한국조폐공사·한국에너지공단·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·한국가스기술공사('21.10월), 한국마사회·한국가스안전공사('20.11월), 한국국토정보공사·한국전기안전공사·산업기술평가관리원('21.12월)	한국 인터넷진흥원 ('21.10월)
027	일반품목 중소기업 현장실증 지원강화	<b>현행</b> 중소기업 기술개발 현장실증에 있어 국산화품목*과 달리 일반품목의 경우 실효적인 지원이 미흡하고 절차가 과도** * 국산화품목과 일반품목이 분리 운영되며, 국산화품목은 수의계약 가능한 반면, 일반품목은 별도 인센티브 없이 국산화품목과 동일한 절차로 수행 <b>개선</b> 일반품목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현장실증 절차를 간소화*하고 운송·설치·철거 등 비용지원 확대 * 수행기관 공모, 현장조사(공장), 제안가격 검토절차 축소 * 동서발전 '발전기자재 TestBed 운영 지침' 개정	한국 동서발전 ('21.6월)
028 - 033	해양수산 기술나눔 신규도입	<b>현행</b> 공공연구 중심의 해양수산 R&D 특성상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<b>개선</b> 해양수산 기술나눔*을 신규 도입하여 기술개발 우수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관련기업 직원교육, 조달진입 지원 * 국내 대기업·공공연구기관의 특허를 무상 또는 소액으로 이전 ** 해양수산과학기술원 '해양수산 기술나눔' 사업 내부결재 <b>개선</b> 한국기상산업기술원·국립공원공단('21.1월), 한국남부발전('21.3월), 국토안전관리원('21.7월), 한국석유관리원('21.8월),	해양수산 과학기술원 ('21.12월)
034	디지털 뉴딜 선도 AI 기술평가 시스템 도입	<b>현행</b> 기술혁신 창업기업들의 적극 지원을 위해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 중심의 기술평가 요구 지속 증대 <b>개선</b> 전문가·인공지능(AI) 기반의 정교화*된 新기술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술사업평가등급뿐 아니라 성장가능성등급 및 위험가능성등급을 구분하여 맞춤형** 기술평가 지원 * (예측력향상) 성장가능성 6%p ↑ (70%→76%), 위험가능성 12%p ↑ (66%→78%) ** (우대지원) 창업기업 보증심사 시 성장가능성등급 반영을 통한 우대지원 가능	기술 보증기금 ('21.1월)
035	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민관공 협업 지원	<b>현행</b> 풍력발전 터빈에 대한 국산부품 의무사용제 도입예정으로 중소 제조기업 풍력 부품 국산화 개발 시급 <b>개선</b> 민·관·공 협업*을 통한 풍력 부품 국산화 개발 추진 및 매칭 중소기업 발굴·선정(3개사)으로 풍력설비 경쟁력 확보 * 부산시(행정지원), 남부발전(테스트베드 제공), 유니슨(개발품 실증) 등	한국 남부발전 ('21.3월)

연번	과제명	주요 내용	소관 (기한)
036 - 045	도로 건설·유지 우수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	<p><b>현행</b>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시험시공 현장을 찾지 못하고 자금력이 부족하여 기술실현 애로</p> <p><b>개선</b> 도로 건설·유지 우수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시험 시공비 및 추적조사 비용 등 지원 * 도로공사 테스트베드 지원 내부결재</p> <p><b>개선</b> 국토안전관리원('20.12월), 한국남부발전('21.1월), 인천항만공사·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('21.3월), 한국석유공사('21.7월), 한국자산관리공사·한국석유관리원·한국기상산업기술원('21.8월), 여수광양항만공사('21.12월)</p>	한국 도로공사 (‘21.10월)
046	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기술사업화 밀착지원	<p><b>현행</b>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공사 보유자원(입주공간, 경영자문) 지원을 넘어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 지원 등을 적극 요구</p> <p><b>개선</b> 'KAC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' 플랫폼*을 신규 구축하여 직접 공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발굴·적용·확산 등 일관 지원 * 우수기술 적용현장 발굴 및 적합성 검토→전국공항 현장매칭→실증홍보 및 상용화 * 공항공사 '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시행 내부결재</p>	한국 공항공사 (‘21.12월)
047 - 051	기술개발 창업기업 인건비 지원	<p><b>현행</b> 초기창업 기업의 R&amp;D 참여 유인책 부족으로 기술 연구개발 관심도 하락 및 지속가능한 R&amp;D정책 역행 우려</p> <p><b>개선</b> 창업 7년 미만의 기술개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(50%) 지원 시행</p> <p><b>개선</b>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'21.1월), 농업기술실용화재단('21.5월)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'21.10월), 한국산림복지진흥원('20.12월),</p>	한국 전력공사 (‘20.4월)
<b>② 공공기관별 주요사업의 규제애로 해소 (14건)</b>			
052	수질측정기기 형식승인 사전검증 기술지원	<p><b>현행</b> 폐수배출사업장 측정기기 형식승인 후 공단 통합시험 의무로 현장시험에서 통신표준규격 부적합 사례 다수 발생</p> <p><b>개선</b> 형식승인 제품의 현장시험 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형식승인 검사 전(前) 사전검증 기술지원 프로그램(공단) 마련·지원 * (수해 사업장) 1,019개, (수해 제작사) 17개사, (예상비용 절감) 1.4억원</p>	한국 환경공단 (‘21.6월)
053	발전설비 비대면 스마트 품질검사시스템 개발·도입	<p><b>현행</b> 발전설비·제품의 대면검사 실시로 신사업(복합·신재생 등) 비중 확대 및 물량 급증 등 검사환경 대응 한계 발생</p> <p><b>개선</b> 발전설비 품질검사 표준화, 모바일 품질검사 앱 개발·적용*을 통해 위탁검사 비용경감(연 8억원) 및 기술기업 검사불편 완화 * 비대면 스마트 품질검사시스템(K-SQIS)</p>	한국 남동발전 (‘21.1월~)
054	전력량계 오차시험 민간인정기관 참여허용	<p><b>현행</b> 1MW 초과발전기 소유 시 규칙에 따라 위탁 또는 직접 오차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나 수요급증으로 시험기간 증가 등 사업자 불편 증가</p> <p><b>개선</b> 오차시험 기관을 민간 인정기관으로 확대하고 인정기관을 3단 검증을 통해 사후관리 강화하여 불편해소 및 안전성 강화 * 전력거래소 '전력시장 운영규칙' 개정</p>	한국전력 거래소 (‘21.12월)
055	완구류 재활용지원금 지급대상 확대	<p><b>현행</b> 회수선별사업자는 재활용지원금*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활용 사업성이 떨어지며, 회수율이 저하 * 자발적 협약제도의 일환으로 생산자는 폐기물부담금 면제 및 재활용사업자는 지원금 부여</p> <p><b>개선</b> 완구류(장난감) 재활용지원금 지급을 기존 재활용사업자 (140원/kg)만이 아니라 회수선별사업자(20원/kg)까지 확대 * 수거처중심 선별체계 구축 시범사업 시행 내부결재</p>	한국 환경공단 (‘21.12월)
056	풍력발전 자발적 수요증대제도 운영방식 개선	<p><b>현행</b> 풍력발전 자발적 수요증대제도(플러스DR)*의 자발적 수요증대량 산정시, 수요자원(고객, 고객연합)내 미참여 고객 실적이 합산되어 수요자원별 증대량 산정값이 실제 증대량보다 적게 산출 * 제주지역 신재생발전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수요자원 단위로 일반전기 사용량을 늘리고 신재생 출력제어량을 줄여서 이를 보상받는 제도</p> <p><b>개선</b> 수요증대량 산정 시 수요자원내 미참여 고객 실적을 제외하여 수요관리사업자와 참여고객의 손실발생 방지 및 제도 활성화</p>	한국전력 거래소 (‘21.12월)

연번	과제명	주요 내용	소관 (기한)
		* 전력거래소 '전력시장 운영규칙' 개정	
057	물 관련 중소기업 해외 인정기준 시험지원	<b>현행</b> 물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성능검증을 하고자 하나 국내 적절한 시험·평가방법 등이 없어 애로* * 해외 인정기준이 국내 기준보다 높거나 관련 시험설비·장비 부족 등 객관적 성능 검증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음 <b>개선</b> 공단(국가물산업클러스트) 자원 및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해외 인정기준과 부합하거나 유사한 시험·평가방법을 개발하고 관련 시험지원 및 국내표준 제정건의 * 환경공단 실험분석 인프라 및 실증화시설 구축 내부결재	한국 환경공단 (‘21.4월)
058	중소기업 기술표준서 전자책 무상지원	<b>현행</b> 정비적격기업 품질 평가대상에 전기설비기술기준(KEPIC)* 보유 여부가 포함되나, 최신기준 구입에 대한 영세기업 부담 가중 * 전력산업 설비와 기기의 안전성, 신뢰성 및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기술적, 제도적 요건을 반영하여 개발된 전력산업계 기술 단체 표준 <b>개선</b> 중소기업 대상으로 KEPIC e-BOOK을 무상 지급하고 기자재 유자격기업 등으로 보급대상을 확대하여 영세기업 지원 강화 * (‘20)중소기업 45개사 지원, (‘21)지속보급 및 지급대상 확대	한국 남동발전 (‘21.1월~)
059	소상공인 방송광고지원사업 공모방식 개선	<b>현행</b>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 공모방식에 있어 모집기간, 심사기준, 신청방식 등이 기업친화적이지 않아 현장불만 <b>개선</b> 공모횟수 확대(연1회→2회), 모집기간 연장(2주→6주), 자격심사 기준 축소(7→6개), 제출서류 간소화(4종→2종) 신청방식 변경 (이메일→홈페이지) 등 공모방식을 기업관점에서 일괄개선 * ‘2021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운영계획’ 반영	한국 방송광고 진흥공사 (‘21.9월)
060	민간체육시설업 비대면 스포츠 산업 지원	<b>현행</b>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실내활동 지양으로 중소체육시설업 매출 급감* 및 경영악화 극심 * 전년대비 실내체육시설 매출은 불과 15% 수준(‘20.12월 기준) <b>개선</b> 비대면 스포츠 시장 인력 양성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등 단계별* 코칭 프로그램 마련 및 사업화 지원** 병행 추진 * 입문(기초역량)→발전(콘텐츠 고도화)→활용(전문가 양성) ** 앱·홈페이지 개발, 영상제작 및 홍보비 지원 등	국민체육 진흥공단 (‘21.12월)
061	전력기자재 전용 온라인 상품관 구축·지원	<b>현행</b> 비대면 수출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, 중소기업 자체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해외 바이어 매칭역량 부족 등 기업애로 호소 <b>개선</b>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* 내 전력기자재 전용 전시관 구축, 한전 브랜드 파워 활용 및 마케팅 지원** 강화 시행 * KOTRA(buyKOREA), 중진공(GobizKOREA), 무역협회(tradeKOREA) ** 입점 기업별 제품사진, 영문기술서 등 콘텐츠 제작비용 지원	한국 전력공사 (‘21.7월)
062	해외기업 진출지원센터 구축 및 맞춤지원	<b>현행</b> 개발도상국 무상협력사업과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연계가 부족하여 기업의 현지 조달정보 확인 등에 애로 <b>개선</b> ODA 해외기업진출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중점지원기업 대상 맞춤 국제입찰 정보제공, 해외조달 시장진입 교육 등 실시 * 국제협력단 ‘ODA 해외기업진출센터’ 구축	한국국제 협력단 (‘21.4월)
063	해양수산 인증기업 판로개척 맞춤지원	<b>현행</b> 코로나19로 해양수산 인증기업의 경영상황이 심각하여 판로개척 등 지원프로그램 추진 필요 <b>개선</b> 해양수산 인증기업(혁신·신기술·녹색 인증 등)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용 기업홍보 책자 제작 및 판로미팅* 등 맞춤지원 * 인증제품 기업(공급자)와 잠재 수요자(구매자) 간 1:1 미팅기회 마련 ** ‘해양수산과학기술원 인증기업 지원 내부결재’	해양수산 과학 기술원 (‘21.12월)
064	보건·복지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성장지원	<b>현행</b> ‘고령친화사업’ 등 보건복지분야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필요 <b>개선</b> 보건·복지분야 우수기업 8개 선정 지원금 지급,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헬스케어 기업 성장기반 조성 * 공단 ‘건이강이 Scale-Up’ 사업 시행(‘21.3~12월)	국민건강 보험공단 (‘21.3월)
065	국토교통 중소·벤처기업 지원프로그램 정보시스템 구축	<b>현행</b> 공공기관의 기업지원이 늘고 있으나 기관별 추진, 산재된 정보제공 등으로 적기 정보지원 어려움 <b>개선</b> 국토교통 분야 유관기관의 기업지원 사업정보 통합 대시보드 구축 및 기업성장 단계별 프로그램 제공	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(‘21.12월)



연번	과제명	주요 내용	소관 (기한)
		* 국토교통지원 Navigator 구축 내부결재	
<b>3. 시장 진입 · 거래 규제 합리화 (164건)</b>			
<b>① 시장 진입규제 완화 및 지원강화 (30건)</b>			
001	에너지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확대 및 지역기업 우대	<b>현행</b> 강소연구개발특구(전남나주)의 특화분야가 에너지신산업분야로 한정됨에 따른 기업지원 및 창업·고용 극대화 한계 발생 <b>개선</b> 사업화지원 범위를 쉐에너지분야로 확대하여 예비·초기 창업자를 지원하고 우대가점 부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*	한국 전력공사 (‘21.4월)
002	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개방·활용 창업지원(관광분야)	<b>현행</b> 공공 관광데이터 개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, 민간기업과의 차별성 및 콘텐츠 부족 등 실질적인 기업 활용률은 감소 <b>개선</b> 관광 빅데이터 API 신규개발, 디지털 관광자원 통합관리시스템* 구축 등 고품질 관광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기업 성장지원 견인 * 관광정보 자원의 체계적 통합 관리로 생산/공유/유통이 가능한 환경 구축	한국 관광공사 (‘21.00월)
003	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개방·활용 창업지원(환경분야)	<b>현행</b> 환경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공모전*(‘15년~) 운영에도 불구하고, 데이터 보유·요청방식 상이 등 자료활용 한계 발생 * 환경 데이터 비즈니스 발굴, 환경정책 제언 창구로 활용 <b>개선</b> 데이터 보유기관과 협의체* 구성·운영, 기업활용 필수 환경 데이터 개방 확대 등 환경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체계 마련 * 환경부 및 소속 산하 공공기관(9개), ‘21.3월 발족	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(‘21.3월)
004	클라우드 보안서비스 개발기업 조달시장 진입지원	<b>현행</b>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는 신유형으로 보안기능 구현적합성 검증 불가하여 보안 중소기업 공공조달 어려움 호소 <b>개선</b> 클라우드 관련기업의 보안기능 구현적합성 검증* 규제를 유예(~‘24년)하고 보안인증 취득만으로 조달시장 진입 허용** * 제품형상이 자주 변하지 않는 보안제품에 대한 기존 검증기준으로 형상이 자주 변경될 수 밖에 없는 클라우드 보안서비스는 검증통과가 어려움 ** 최소한의 보안성을 보안인증으로 평가하고 구현적합성 검증은 별도 평가방법론을 개발·적용	한국 인터넷 진흥원 (‘21.6월)
005	원전 중소기업 제조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현실화	<b>현행</b> 원전시장 수축으로 중소제조업은 물품제조·구매 적격심사 시 감점요소가 증가하여 애로 가중 <b>개선</b> 제조기업 신인도 가점조정(0.5점→1.0점) 및 고용유지 항목 신설(0점→0.5점)로 경영악화기업 조달참여 기회 제공 * 한수원 ‘물품구매제조 적격심사기준 신인도 ‘중소(제조)기업’ 항목’ 개정	한국수력 원자력 (‘21.4월)
006	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평가배점 합리화	<b>현행</b>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기준상 KTP* 배점비중이 과다하여 다수 기업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 박탈 * 우수협력사 수출촉진 브랜드(한전 납품실적이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) <b>개선</b> KTP 인증 기업에 대한 평가배점 조정(20점→5점) 및 유망기업* 인증 배점 신설 등 중소기업 사업참여 기회 확대** * INNO-Biz, MAIN-Biz, 수출유망기업 등 ** 기준 변경 전 대비 KTP 미인증 기업 참여비율 65% 증가	한국 전력공사 (‘21.4월)
007	장애인고용 해외진출 지원사업 운영현실화	<b>현행</b> 장애인고용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수출안전망 보험가입*을 지원하는 것이나 수출실적 규모제한으로 인해 참여애로 * 수출실적 US\$10만 미만 사업체만 가입이 가능(무역보험공사)하여 일시적으로 연매출이 증가한 중소기업들도 가입을 못하는 사례 발생 <b>개선</b> 수출안전망보험 가입지원과 함께 수출실적 규모제한이 없는 단체보험* 지원을 신규 실시하여 해외진출 지원강화 * 다만 US\$3천만 초과 기업은 가입 불가 ** 장애인고용 관련 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고 반영	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(‘22.상)
008 - 016	혁신도시 지역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(적격심사)	<b>현행</b>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후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중이나 실적부족 등으로 지역기업 조달진입 미흡 <b>개선</b> 물품 구매를 위한 적격심사 평가에 혁신도시 지역기업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 신설·부여(1.0점) * 남부발전 ‘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’ 개정	한국 남부발전 (‘21.9월)

연번	과제명	주요 내용	소관 (기한)
		<b>개선</b> 신용보증기금.한국소비자원('20.12월), 한국국토정보공사('21.1월), 도로교통공단.한국전기안전공사('21.10월), 한국전력기술.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.한국석유공사('21.12월),	
017 - 021	혁신도시 지역기업 신인도 가점 부여(MAS 2단계 경쟁)	<b>현행</b>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서 평가시 지역기업은 기술평가 점수획득에 애로 <b>개선</b> 2단계 경쟁시 기관 소재 지역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(1점) 부여 * 한전KDN 제안서 평가기준 개정	한전KDN ('21.3월)
		<b>개선</b>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'20.12월), 한국전기안전공사('21.10월),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'21.12월), 근로복지공단('22.1월),	
022	사회적기업 수의계약 참여 허용	<b>현행</b> 1인 건적 수의계약가능 대상범위가 여성·장애인 기업으로 한정되어, 사회적기업, 자활기업 등의 조달진입 애로 <b>개선</b> 수의계약 대상범위에 사회적기업 등 포함하여 판로확대 지원 * 한국석유공사 '수의계약운영기준' 개정	한국 석유공사 ('21.1월)
023	폐기물 소각시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실적기준 완화	<b>현행</b>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기술형 입찰*에 있어 반복적으로 적격기업이 없어 유찰이 지속 발생 및 기업진입 저해 * 설계·시공 일괄입찰(턴키), 기본설계 기술제안 <b>개선</b> 소각시설 기술형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공사실적 평가등급 기준을 50% 완화하여 조달진입 기회 부여 * 환경공단 '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' 개정	한국 환경공단 ('21.4월)
024	어장정화정비업 폐기물 수거용역 입찰기회 확대	<b>현행</b> '어장'과 '비 어장'이 혼재한 해역이 적지 않아 어장정비만을 할 수 있는 어장정비업의 경우 입찰기회가 미미* * 혼재해역은 '어장 외'를 할 수 있는 해양폐기물 수거업이 담당 <b>개선</b> 혼재해역을 '어장'과 '비 어장'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용역을 발주,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어장정비업의 조달진입 확대 * '폐기물 수거용역 발주 지침 방침' 개정	한국 수산자원 공단 ('21.4월)
025	인천항 항만부지 임대사업자 선정방식 개선	<b>현행</b> 인천항 항만 배후부지는 최고가 입찰에 의한 사업자선정 방식으로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 야기 <b>개선</b> 배후부지 선정방식을 배후단지와 같이 사업계획서 평가방식으로 개선하고 필수평가 항목을 제외한 주요 평가항목 및 제출서류(200p→20p)를 대폭 축소 * 인천항 항만배후부지 임대관리지침 개정	인천 항만공사 ('21.4월)
026	부정당 제재업체 대상 과도한 신인도 감점조항 삭제	<b>현행</b>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, 부정당 제재업체에 대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2년간 감점으로 과도함 지적 <b>개선</b> 적격심사 시 부정당 제재업체의 신인도 감점사항 삭제 * 남동발전 '계약규정(적격심사 신인도)' 개정	한국 남동발전 ('21.4월)
027 - 030	한국전력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 실시간 알림서비스 도입	<b>현행</b> 공공기관 입찰정보 확인시 한국전력 전자조달시스템(SRM) 접속·검색 등 행정불편 발생 및 적기 입찰내용 확인 애로 <b>개선</b> 입찰정보 알림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관심있는 입찰정보를 실시간 문자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* * 한국전력 전자조달시스템(SRM) 시스템 고도화	한국전력 ('22.6월)
		<b>개선</b>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'21.2월), 한국남부발전.한국남동발전('22.상)	
<b>2 계약 및 거래관계의 규제 합리화 (134건)</b>			
031	화훼공판장 입주사 대상 과도한 관리규제 개선	<b>현행</b> 화훼공판장 입주사를 대상으로 접객태도 검사, 불합리한 자료제출 의무 부여, 신용조사 실시 등 과도한 영업규제 만연 <b>개선</b> 화훼공판장 입주사에 대한 불필요한 지도점검.검사, 과도한 자료제출, 신용조사 실시 등을 개선* * ① (점검.검사) 거래형태 가격, 품질, 영업장부, 종사원 교육.접객태도 등 항목폐지, ② (자료제출) 거래처 관련자료, 매출현황.내역 제출 폐지, ③ (신용조사) 폐지 ** 화훼사업센터 시설운영 관리요령 개정	한국 농수산물 식품 유통공사 ('21.9월)
032	항만시설 사용변경	<b>현행</b> 기 승낙받은 항만시설의 사용변경 시 사전승낙이 필요하고 사용료 1회 이상 체납시 계약해지를 규정하여 과도한 권리 부여	울산 항만공사

연번	과제명	주요 내용	소관 (기한)
	사후승낙 신설 및 사용정지 요건완화	<b>개선</b> 현장상황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 사용변경을 사후승낙토록 개선 하고 사용료 체납(1일)에 따른 엄격한 사용정지 요건을 정비(3월) *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	(‘21.9월)
033 - 039	계약체결 포기기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	<b>현행</b> 일반기업과 달리 경쟁입찰 낙찰 포기기업은 1년 이내 타 입찰 참가시 입찰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 기업불만 <b>개선</b> 자재단가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계약체결 포기기업에 대하여도 일반기업과 같이 조달 입찰보증금 납부의무 면제 * 한국중부발전 계약규정 개정	한국 중부발전 (‘21.10월)
		<b>개선</b> 국토안전관리원(‘20.12월), 울산항만공사·한국특허전략개발원(‘21.10월),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‘21.12월), 국립생태원·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‘22.상)	
040	도로 유지보수공사 위탁시 교통관리비 단가 상향	<b>현행</b> 도로 유지보수공사 위탁시에도 도급단가*가 적용되어 위탁 기업 적정단가 확보 애로 및 교통차단 안전문제 발생 우려 * 조달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하게 되어 설계단가 대비 도급단가는 약 86% <b>개선</b> 교통차단 등 교통관리비는 도급단가가 아닌 설계단가로 반영하여 별도정산토록 개선, 적정대가 보장 * 도로공사 유지보수공사 계약서 내용 개정	한국 도로공사 (‘21.6월)
041 - 058	안전감시인 대가반영 기준 마련	<b>현행</b> 위험작업시 안전감시인* 배치가 필수이나, 대가기준 부재로 비용 미반영에 따른 실효성 저하 및 하도급사 비용전가 우려 * 신호, 유도, 화재점검 등 일반근로자와 구분되어 안전감시 역할 <b>개선</b> 안전관리인 인건비를 직접인건비로 반영토록 내규개선 등 안전감시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정당한 대가기준* 마련 * 전담인력 노무비를 설계서에 반영(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분리 계상)	한국 중부발전 (‘21.5월)
		<b>개선</b> 한국동서발전(‘21.1월), 한국공항공사(‘21.7월)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· 그랜드코리아레저·울산항만공사·한국자산관리공사·한국관광공사· 한국가스공사·한국소폐공사(‘21.10월), 한국국토정보공사(‘21.12월), 국립생태원·한전KDN·한국가스안전공사·국립공원공단·한국장애인 고용공단·한국보육진흥원·한국산림복지진흥원(‘22.1월)	
059	컨테이너 전용열차 화차 미공급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	<b>현행</b> 공사 사유로 화차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상기준 부재로 협력업체 불공정 거래피해 발생 * 고객사 사유로 전용열차 협약량 만큼 컨테이너를 수송하지 못한 경우 미적재 운임을 부과중 <b>개선</b> 고객사에 부과하는 미적재 운임과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화차 미공급에 대한 보상내용을 명확히 하여 피해 보상 * 컨테이너 전용열차 협약서 개정	한국 철도공사 (‘21.2월)
060 - 069	소액 수의계약 적정단가 보장	<b>현행</b> 소액 수의계약시 예정가격 이하 견적 제출로 계약금액 하향조정 불가피, 물품구매 하자보수보증금 제출로 중소기업 부담 가중 <b>개선</b> 소액 수의계약시 예정가격을 감액없이 계약금액으로 결정, 소액 물품구매시 하자보수보증금 제출의무 면제* 개선 * 3천만원 미만 또는 계약기간 1년 이내인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** 한국남동발전 계약규정 개정	한국 남동발전 (‘21.4월)
		<b>개선</b> 한국남부발전(‘21.10월), 울산항만공사·한국특허전략개발원·한국중부발전 ·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(‘21.10월),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·국토안전 관리원(‘21.12월), 인천항만공사(‘21.1월), 한국수산자원공단(‘22.하)	
070 - 095	공정계약서작성 의무화	<b>현행</b> 협력사에 대한 부당한 업무 외 지시 등 공정업무 저해요인 상존으로 영세기업 경영부담 및 계약불만 상승 초래 <b>개선</b> 계약체결시 발주자 의무사항*을 명시한 공정계약서작성 작성 의무화 등으로 공공조달시장 공정화 추진 * 금품·향응 요구행위 금지, 계약과 무관한 의무부과 금지 등	한국 남부발전 (‘20.12월)

연번	과제명	주요 내용	소관 (기한)
		<p><b>개선</b> 한국무역보험공사·신용보증기금·정보통신산업진흥원·한국특허전략개발원(‘20.12월), 인천항만공사(‘21.1월), 한국교육학술정보원(‘21.2월), 강원랜드(‘21.3월), 한국보육진흥원(모범거래모델), 한국남동발전(‘21.4월), 한국임업진흥원·창업진흥원(‘21.6월), 한국인터넷진흥원(공정계약서약)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(‘21.7월), 국립생태원(‘21.8월)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‘21.9월), 해양환경공단·국립공원공단(‘21.10월)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(‘21.11월), 한국석유공사·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·기술보증기금·한국석유관리원·국토안전관리원(‘21.12월)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·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(‘22.6월)</p>	
096 - 110	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	<p><b>현행</b>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간 비표준 계약서 사용으로 불합리한 계약조항에 대한 발주자 확인 불가</p> <p><b>개선</b> 원도급자와 계약 시 ‘표준하도급계약서’ 사용을 의무화하여 하수급자 권리 강화</p> <p><b>개선</b> 한국관광공사·정보통신산업진흥원·한국남동발전(‘21.1월), 한국교육학술정보원·한국특허전략개발원(‘21.10월), 한국임업진흥원(‘21.6월), 한국조폐공사·한국마사회·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·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·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·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(‘21.12월), 한국인터넷진흥원(‘22.3월)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‘22.6월)</p>	한국 지역난방 공사 (‘20.12월)
111 - 125	발주자 계약해지 요건 명확화	<p><b>현행</b> 발주자 필요에 의한 계약해지시 명백한 해지사유 요건이 규정화 되어있지 않아 자의적 해석 및 기업 권익침해 우려</p> <p><b>개선</b>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정비 * 한국남부발전 계약규정 개정</p> <p><b>개선</b> 한국마사회(‘21.1월), 국토안전관리원(‘21.4월), 그랜드코리아레저·한국임업진흥원·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‘21.6월),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‘21.11월),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·한국인터넷진흥원·한국보육진흥원·한국수산자원공단·한국특허전략개발원(‘21.12월), 한국공항공사(‘22.1월), 한국과학창의재단(‘22.3월), 창업진흥원(‘22.6월)</p>	한국 남부발전 (‘20.12월)
126	계약 검사 시정조치 이의제기 명문화	<p><b>현행</b> 계약내용 위반 또는 부당함 발견 시 시정조치토록 하여 일선담당자의 과도한 재량권 발생, 기업피해 우려</p> <p><b>개선</b> 시정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의제기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부당한 시정조치 방지 및 용역사 보호 * 계약 및 검사·검수 규정 개정</p>	그랜드 코리아 레저 (‘21.6월)
127 - 134	소액 수의계약 계약정보 관리 의무화	<p><b>현행</b> 소액 수의계약 체결시 별도 계약정보 입력·관리시스템 부재로 계약 투명성·공정성 저해요인 상존</p> <p><b>개선</b> 모든 소액 수의계약 건에 대한 모니터링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정보* 입력·관리를 의무화 * 계약건명, 수의계약 사유, 계약상대자 정보 등 주요정보 입력 의무화</p> <p><b>개선</b> 근로복지공단(‘21.1월), 한국환경공단(‘21.9월),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, 도로교통공단(‘21.10월), 한국디자인진흥원·한국공항공사(‘21.12월), 한국지역난방공사(‘22.6월)</p>	한국 남부발전 (‘20.12월)
135	상생결제시스템 의무대상 확대	<p><b>현행</b>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시 상생결제시스템* 활용중이나, 영세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확대요구 증가 * 발주처가 원도급사 통장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사 및 자재·장비·노임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대금지급시스템</p> <p><b>개선</b>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의무화 대상 확대(5천만원→3천만원) 및 노임 직접지급 등 하도급 대금지급 투명성·효율성 강화 * 한국남부발전(주)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세칙 개정</p>	한국 남부발전 (‘21.1월)
136 - 164	협력기업 상생결제제도 도입 확대	<p><b>현행</b> 1차 협력기업(민간기업) 하도급 활용시 어음결제,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거래 관행, 2차 이하 협력기업 피해 발생</p> <p><b>개선</b> 물품구매·용역계약시 대금을 상생결제(협약은행) 방식으로 지급토록 하여 2차 이하 협력기업 거래피해 방지 * 상생결제론 도입 업무협약 체결 등 상생결제제도 도입 내부결재</p>	한국 전기안전 공사 (‘21.5월)



연번	과제명	주요 내용	소관 (기한)
		<b>개선</b> 강원랜드, 해양환경공단, 우체국금융개발원, 한국디자인진흥원,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'20.12월), 국립생태원('21.1월), 한국특허전략개발원('21.4월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그랜드코리아레저('21.6월), 농업기술실용화재단('21.7월),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, 국립공원공단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('21.8월), 한국소비자원('21.9월), 신용보증기금, 한국자산관리공사('21.10월), 한국석유관리원('21.11월)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, 인천항만공사, 한국무역보험공사,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한국재정정보원, 한국교육학술정보원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한국과학창의재단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, 한국임업진흥원('21.12월)	
<b>4. 행정부담 감축 및 현장애로 해소 (112건)</b>			
<b>1 행정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(38건)</b>			
001	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신청서류 간소화	<b>현행</b>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품질검사 받아야하며 각기 발급처가 다른 신청 서류에 신청인 불편 가중 <b>개선</b> 기관이 직접 확인 가능한 품질검사* 신청서류(사업자등록증, 수출입업 등록수리서) 제출을 폐지하여 서류발급, 제출 부담 경감 * 한국석유관리원 '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업무규정 시행세칙' 개정	한국석유관리원('21.10월)
002	공사·용역 보안서류 제출대상·범위 명확화	<b>현행</b> 공사·용역계약시 정보 보안 연관성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의 보안서류* 제출을 의무화, 기업 행정부담 상당 * 보안서약서 및 각서, 자료삭제 및 반납확인서, 보안확인서 등 <b>개선</b> 계약의 종류, 유형 등 정보보안 필요여부를 세분화하여 보안서류 제출대상 명확화 및 축소조정 * 공사·용역 계약 보안특약 조항 개정	한국중부발전('21.10월)
003 - 004	특정공법 선정심의의 절차 및 공개범위 및 기간 확대	<b>현행</b> 특정공법* 선정심의 절차가 불투명하고 이의제기 기간인 짧아 관련 중소기업의 현장불만 상당 * 순공사비 1억원 이상 고속도로 신설, 확장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특허, 신기술 등 공법 <b>개선</b> 심의결과 공개기간과 이의제기 신청기간 연장(5일→10일) 및 평가점수·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* 도로공사 '특정공법 선정평가 지침' 개정	한국도로공사('21.5월)
		<b>개선</b> 여수광양항만공사('21.12월)	
005	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절차 마련	<b>현행</b> 화학물질등록의무제에 따라 기업의 등록부담 경감을 위해 공단에서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·제공중이나 기업활용 편의성 저하 * 화학물질의 성질, 인체(건강),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한 자료로서 공단은 자료를 생산하고 저작·국유재산권 등록 후 기업에게 제공(사용료 수취) <b>개선</b> 유해성 시험자료*를 기업이 조기에 사용(2개월→2주)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조건부 사용승인** 절차 도입, 부담 경감 * 자료생산(10월말) 후 시험요약 자료를 공개하고 향후 구매를 조건(사용료)으로 저작·국유재산권 등록 전에 먼저 기업에게 제공하여 등록지연(연말) 내 등록지원	한국환경공단('21.12월)
006	인공지능 기반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도입	<b>현행</b> 과점시장* 특성상 입찰 참여업체간 담합행위 발생시 경쟁력 있는 선의의 피해기업 발생 * 사례 :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OO계약 건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 A사는 예정가격보다 한참 못 미치는 투찰가격을 써내어 의도적으로 B사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데 일조 <b>개선</b> 입찰담합행위 예방을 위해 그간의 축적된 입찰정보*를 AI 활용 빅데이터 분석, 담합징후 사전포착 및 담합방지 * 낙찰률, 투찰가격, 경쟁방법, 유찰 및 예정가격 인상횟수, 수의계약 전환여부 등	한국남부발전('21.12월)
007 - 009	온라인 수출지원 사업 선정결과 이의제기 제도 도입	<b>현행</b>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미비로 절차적 정당성 및 신뢰 약화 <b>개선</b>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조항 신설 *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'21.2월)

연번	과제명	주요 내용	소관 (기한)
		<b>[개선]</b> 한국지역난방공사.한국장애인고용공단('21.10월)	
010 - 011	농림축산식품 연구과제 중간평가 부담경감	<b>[현행]</b> 농림축산식품 연구과제의 경우, 매년 연차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를 받도록 하여 참여기업 행정부담 상당* * 또한 과제 수행 및 성과창출 정도와 상관없이 소요기간별 일률적인 평가진행으로 참여기업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 상당(미흡시 중점관리 등) <b>[개선]</b> 연구성과에 대한 연차별 평가를 단계평가*로 전환하여 참여기업 행정부담 경감(약 1,900여개사) * 다년도 연구과제는 통상 2년 단위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, 성과, 다음 단계 연구수행 계획 등을 단계보고서를 통해 평가 **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개정	농림식품 기술기획 평가원 ( '21.3월)
		<b>[개선]</b> 한국남동발전(현장기술 연구개발과제 중간평가를 비대면으로 전환, '21.1월)	
012	철도차량.부품 설계승인 행정부담 경감	<b>[현행]</b> 철도차량.부품 설계승인시 설계도서 출력.제출.수기날인 등* 과도한 서류제출, 복잡한 승인절차 등으로 제작자 부담 심화 * 승인절차 : 설계도서 출력(제작사) → 제출(제작사) → 검토 결과회신(公社) → 수기날인(제작사/公社) → 스캔(제작사) → 시스템 등록(제작사/公社) <b>[개선]</b> 설계승인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류제출(10만매) 부담 경감 및 승인절차 간소화(6단계→3단계)* 등 행정부담 간소화 * 설계도서 업로드(제작사) → 전자날인(公社) → 설계도서 다운로드(제작사) ** 철도공사 '전자관리시스템' 구축운영	한국 철도공사 ( '21.9월)
013 - 021	각종 서류제출 전자문서 활용확대	<b>[현행]</b> 공사 관련 서류(계약서, 착수계 등) 제출시 등기 또는 방문접수 토록 하여 기업 행정불편 및 업무 비효율성* 가중 * 문서 파손 및 분실, 출력서류 과다, 비생산적 추가업무 등 <b>[개선]</b> 문서24 시스템을 도입하여 협력사와 전자문서 유통망을 구축 하고 공사 관련 서류 One-line 처리, 행정부담 감축	한국 중부발전 ( '21.12월)
		<b>[개선]</b> 기술보증기금('21.1월), 한국과학창의재단('21.4월), 한국KDN('21.7월),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(HACCP 전자문서 인정, '21.8월)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'21.11월), 울산항만공사.한국동서발전.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('21.12월)	
022	수출인 연대보증인 비대면 약정 체결 허용	<b>[현행]</b> 연대보증인 자필서명을 통한 대면 약정 체결절차로 인해 수출업체 불편 야기 <b>[개선]</b> 연대보증인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징구(본인 및 대리인)를 통해 비대면 약정체결을 허용 * 무역보험공사 비대면 약정업무 개선 내부결재	한국 무역보험 공사 ( '21.2월)
023 - 029	실적증명서 발급 소요기간 단축	<b>[현행]</b> 실적증명서 신청시 사업내용(주관부서) 및 계약내용(계약부서) 확인절차로 인해 발급 소요기간이 상당, 기업불편 초래 <b>[개선]</b> 발급신청시 사업.계약부서 담당자가 즉시 인지.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알림기능을 도입하여 소요기간 단축 * 도로공사 '전자소달시스템' 고도화	한국 도로공사 ( '22.6월)
		<b>[개선]</b> 주식회사 에스알('20.12월), 한국국토정보공사('21.12월), 한국산림복지진흥원('22.1월), 한전KDN.한국과학창의재단.한국특허전략개발원('22.3월)	
030 - 038	외부고객 방문 관리시스템 개선	<b>[현행]</b> 발전소내 외부고객 방문시 개인정보 수기작성 등에 따른 이용불편 및 출입절차 복잡으로 이용자 불만고조, 만족도 저하 <b>[개선]</b> 방문고객 개인정보 암호화, 사전출입신청 셀프시스템 구현 등 외부고객 출입편의성 제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 * (당초)방문자 정보 수기입력 → (변경)인터넷 출입신청, QR코드 확인	한국 남동발전 ( '21.1월)
		<b>[개선]</b> 한국남부발전('21.3월), 한국자산관리공사.한국수산자원공단('21.4월), 창업진흥원('21.9월), 해양환경공단('21.10월), 한전KDN.인천항만공사.주식회사 에스알('21.12월),	
<b>[2] 현장애로 해소 및 사회적 책임 강화 (74건)</b>			
039	열차 내 광고	<b>[현행]</b> 열차광고 계약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광고	주식회사

연번	과제명	주요 내용	소관 (기한)
	영업권 최대 계약기간 연장	효과 저감 등 영업적자 지속으로 기업불만 가중 <b>개선</b> 영업환경 변화 및 설비개량 비용 등을 고려하여 광고 영업권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* SR 광고영업규정 개정	에스알 (‘21.7월)
040	건설기계 제작업체 무상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	<b>현행</b> 영세한 건설기계 제작업체는 의무사항인 형식승인(신고) 등 인증 시 인력난 등으로 진행이 어려워 시행착오 잦음 <b>개선</b> 건설기계 형식승인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무상 현장방문 컨설팅*을 실시 * 비위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식사시간외 컨설팅 및 컨설팅 당일 복귀, 감사부서 동반출장 **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방문컨설팅 도입 내부결재	대한건설 기계안전 관리원 (‘21.07월)
041	도로공사 설계환경 변화대응 무상교육 실시	<b>현행</b> 건축정보모델* 전면 도입으로 중소설계사 역량강화 필요 *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시설물 형상, 속성 등을 디지털 정보로 표현하는 설계 <b>개선</b> 중소 설계기업의 건축정보모델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교육을 온.오프라인 무상실시(63명, 28백만원) * 도로공사 교육지원 추진계획 내부결재 및 예산지원	한국 도로공사 (‘21.10월)
042	소비자 민원에 대한 기업의견 진술권 강화	<b>현행</b> 소비자 민원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진술 기한(3일) 초과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부담 <b>개선</b>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진술 기회를 추가 보장*하여 기업 불이익 최소화 * 최소한 3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,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는 간주규정 폐지 ** 소비자원 ‘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규칙’ 개정	한국 소비자원 (‘21.10월)
043	산업단지 개발관련 기업실패 제도강화	<b>현행</b> 비위행위자에 대한 자체 제재시스템이 미약하여 예방강화를 위한 내부 통제 규정신설 등 필요 <b>개선</b> 산단개발 미공개 정보 취급 직원 등의 내부통제 제도*와 중대 비위자에 대한 제재** 강화 * 청렴서약서 작성 의무화, 토지보상 관련 익명신고 신설,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등 ** 성과급 지급제한, 임원징계 시 심의기구 상향 (인사위→이사회) 등	한국산업 단지공단 (‘21.2월)
044 - 055	협력기업 근로자 휴가바우처 지원	<b>현행</b> 경영난을 겪는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를 통한 기업활력 제고 필요 <b>개선</b> 협력기업 직원 대상 국내사용 휴가바우처 지원으로(1인당 40만원*, 15명) 협력사 근로자 복지 제고를 통한 상생협력 실천 * 우체국금융개발원(10만원)+관광공사(10만원)+근로자(20만원) <b>개선</b> 주식회사 에스알(‘20.12월), 한국동서발전 국립공원공단(‘21.1월)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‘21.4월), 한국석유관리원,한국공항공사, 한국전력기술(‘21.6월), 한국가스기술공사(‘21.8월), 여수광양항만공사,한국소비자원(‘21.10월), 강원랜드(‘21.12월)	우체국 금융 개발원 (‘21.7월)
056	협력사 수요맞춤형 업무 Q&A 가이드북 배포	<b>현행</b> 공공기관 계약법령, 지원제도 등에 따른 업무절차가 복잡하여 협력업체 업무추진에 어려움* 호소 * 775개 협력업체 대상 업무 아이디어 설문 조사 실시(‘21.3.~4월) <b>개선</b> 계약법령, 지원제도 등 공공기관 행정가이드북 무료 제작·배포	한국 동서발전 (‘21.6월)
057	지역 농·어·임업인 특산물 판매장 개설	<b>현행</b> 코로나19로 농어업 소득이 급감함에(전년대비 57%) 따라 농어업인 보호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필요 <b>개선</b> 국립공원(북한산) 내 상가임차로 무료특산물 판매장 시범 운영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 활로 개척 * 국립공원공단 특산물 판매장 개설 내부 결재	국립공원 공단 (‘21.4월)
058	지역공항 및	<b>현행</b>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어려움 증가	한국

연번	과제명	주요 내용	소관 (기한)
	소상공인 연계 판로지원	<b>개선</b> 국내 지역 공항과 주변 소상공인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할인쿠폰 지급 및 사전예약 판매 추진*, 판로지원 * 양양·여수공항 지역내 소상공인 제품 최대 40%까지 할인 지원하고 민간(네이버) 협약 온라인 사전판매 등을 통해 4개월간 20개 기업 참여 4.3억원 매출 성과	공항공사 (‘21.12월)
059	소상공인 농수산물마켓 규모 확대	<b>현행</b>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드라이브 스루 농수산물마켓을 연 1회 개최중이나, 소상공인은 규모 확대를 지속 요구 <b>개선</b> 농수산물마켓 후원금액 증액 및 개최 횟수 확대로 영세기업 판로지원 및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* (후원금액) 5천만원→1억원, (횟수) 연1회→연2회	부산 항만공사 (‘21.11월)
060 - 070	지역 영세 소기업·소상공인 민수·조달 판로개척 지원	<b>현행</b> 영세 소기업·소상공인은 디지털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민수·조달 판로개척 추진에 애로 <b>개선</b> 수요조사를 거쳐 영세업체 대상으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교육 실시 및 사회적 약자기업 동반성장몰 입점 지원 강화 * ‘전자조달시스템’ 교육지원 및 사회적 약자기업 판로지원 등 내부결재 <b>개선</b> 한국남부발전(‘21.1월), 한국보육진흥원(‘21.2월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주식회사 에스알(‘21.6월), 강원랜드(‘21.7월), 국립공원공단, 인천항만공사(‘21.10월), 그랜드코리아레저, 한국공항공사, 한국관광공사(‘22.1월)	국립 생태원 (‘21.7월)
071	재난발생시 지역사회 및 단체 후원 확대	<b>현행</b> 관련기준에 따라 지역단체 등의 행사 및 사회공헌활동을 지원중이나, 코로나19 등 재난 위기에 대한 후원 근거 부족 * 한국중부발전 지역사회 및 단체 등에 관한 후원 기준 <b>개선</b>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지역단체 운영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경우에도 직접적인 후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기준 개선	한국 중부발전 (‘21.10월)
072 - 078	중소기업 대금지급 신속처리	<b>현행</b> 기업이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, 기관의 회계처리가 늦어 세금계산서 재발행 등 불편 초래 <b>개선</b> 기관 사내 업무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알림서비스 기능을 추가하여 대금지급 기한준수 등 불편 완화 * 사내 메신저 알림서비스 기능 개발.추가 <b>개선</b> 국민연금공단, 한국관광공사(‘21.1월),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(‘21.2월), 한국석유공사(‘21.12월)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(‘21.9월)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(‘22.12월)	한국 남동발전 (‘21.6월)
079 - 103	기업친화적 사규 운영방안 개선	<b>현행</b>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규 공개에도 불구하고, 각 사규별 담당자(연락처)가 명시되지 않아 신속한 민원대응 불가 <b>개선</b> 사규별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외부 기업의 사규 관련 문의시 신속한 대응 및 민원해소가 가능하도록 조치 <b>개선</b> 한국산림복지진흥원(‘20.12월), 한국공항공사, 한국디자인진흥원(‘21.1월), 한국환경공단(‘21.9월), 한국동서발전, 한국중부발전, 한국지역난방공사, 인천항만공사, 주식회사 에스알, 한국석유관리원,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한국전기안전공사(‘21.10월), 해양환경공단, 한국전력기술, 근로복지공단(‘21.11월),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국토안전관리원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재정정보원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,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, 한국수산자원공단(‘21.12월)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(‘22.2월),	한국 남동발전 (‘21.7월)
104	사규개정 온라인 설명회 개최	<b>현행</b> 공공기관 사규개정시 홈페이지를 통한 개정예고 시행중이나, 접근성 부족 등 수요자 위주 정보전달 한계 발생 <b>개선</b> 기업관련 사규 개정시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한 설명회 개최 및 대국민 홍보영상 공유 등 기업친화적 정보전달 체계 구축	한국 남부발전 (‘21.6월)
105	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	<b>현행</b> 산업현장 불법하도급 등에 따른 생계형 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 발생시 고용안정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우려 증가	한국 남동발전

연번	과제명	주요 내용	소관 (기한)
	의무화	<b>개선</b> 원·하수급자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로 시공품질 저하 방지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	(‘21.11월~)
106 - 112	기관업무 책임성·청렴성 강화	<b>현행</b> 공단 임직원 행동윤리강령에 사익추구 금지 근거조항 부재 <b>개선</b> 기관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추구 금지규정 명문화,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정비 및 전직원 서약서 징구의무화 * 한국교통안전공단 ‘윤리강령’ 제17조의2 개정	한국교통 안전공단 (‘21.6월)
		<b>개선</b> 한국남부발전(지역기업 청렴 네트워크 구축, 청렴모니터링 설문조사 실시, ‘21.6월), 한국주택금융공사(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관련규정 정비, ‘21.00월), 한국도로공사(부패근절 조직문화 진단을 통해 반부패 추진전략 수립·시행, ‘21.5월), 국제방송교류재단(인권윤리경영 적용범위 확대, 윤리경영 서약, ‘21.4월), 해양환경공단(반부패 CEO 서약, 윤리경영가이드 배포, 반부패 청렴문화 선언, ‘21.5월), 한국전력기술(청렴상생·인권 프로그램 지원 및 의무교육 실시, ‘21.9월),	